“12·3 윤석열 내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에 尹 즉각 체포 요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내란 조사 특별법’ 추진
국방부 법무관리관·방첩사 감찰실장 직무배제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등 법사위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끝나지 않은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12·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음을 국민께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의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 방첩사를 수사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 “계엄 관련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내란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군 내부의 내란 관련자는 속히 직무에서 배제되고 당연히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韓대행 탄핵’ 여파…여야정협의체 좌초 위기

與 “민주, 국정안정 의지 없어” 野 “내란 잔당 준동…진압이 먼저”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이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지난 23일 합의했지만, 협의체의 정부 측 대표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맞서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회의 일정을 합의했을 당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참여에 동의했으면서도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할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정안정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가부와 관계 없이 협의체 출범도 한동안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다”

“국민 상식 부합하게 책임 다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재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507 절도 등
제2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1660 절도 등
피 고 인 백종두

위 피고인은 절도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12. 20.

판사 박 병 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259 사기 등
피 고 인 노상욱

위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12. 26.

판사 박 영 기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접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CMYK